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지방소멸'의 시간들

조문영

일시: 2025년 6월 30일 7:30-9:30pm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발 '소멸' 경고를 곧바로 정책화하면서 '지방소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인프라가 얽힌 거대 산업으로 부상했다. 이 강연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행정·이주·청년·선주민·인프라스트럭처·자연의 시간이 마찰을 일으키는 인류학 연구 현장으로 청중을 초대한다. 인구 위기와 극복이라는 개발의 서사를 넘어, 우리가 어떤 쇠퇴와 사라짐을 어떻게 정치적·윤리적으로 쟁점화할지 살펴본다.

주요 논의 내용

- '지방소멸' 담론과 통치 레짐(regime)의 형성
- 청년 이주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책 현장의 역동
- 지방이 '로컬'로 번역되는 과정과 그 함의

소멸과 생성 사이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는 젊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2040년까지 일본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논의는 곧바로 한국에 번역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만연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마스다 보고를 토대로, 감사원은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되리라 전망했다.

수도권이 연구개발·관리 등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이 생산기지나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위계적 분업 구조가 빚어낸 불평등의 공간화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더욱 노골

적인 경관이 되었다. 발전의 후과(後果)를 발전의 서사에 기대어 논하는 위협의 서사는 더 '혁신적인' 발전을 해결책으로 주문한다. 이 공론장에서 지방은 스마트팜, 메가시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전략이 실험되는 프런티어 frontier 로 부상한다.

하지만 기후재난, 전염병, 금융자본주의, 지정학적 위기 등 불확실성이 전면화된 시대, 발전과 진보가 더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는 역으로 지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움직임을 추동해 내고 있다. 근대성의 중심 지향적 논리를 거부하면서 지방을 공동체, 돌봄, 자치, 여성주의 실천의 핵심 현장으로, 새로운 체제 전환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방소멸의 시간들

지방에 관한 논의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시소를 타지만, 지역민들의 구체적 삶에서 미래란 언제나 복수로 등장한다.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도, 생성에 대한 기대가 양극단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뉘비우스의 띠처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인류학자 발렌타인과 하순은 '공동의 미래'를 선불리 전제하기 전에 '공통적이지 않은 미래들'을 세심하게 고려하길 제안한다. '미래'는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어떤 스케일로 등장하는가? 어떤 종류의 수수께끼, 문제 또는 해법으로 등장하는가? 복수의 시간, 복수의 미래를 펼쳐 보이는 일은 서로에게 공통적이지 않은, 장기간에 걸쳐 위계화·분절화된 과거'들', 현재'들', 미래'들'을 포착하면서 권력 관계의 주름을 훑아보는 작업이다. 지역에서 누가 현재의 상태를 위기와 재난으로 먼저 인지하는가? 누가 '소멸'이라는 걱정의 묵시론에 감응조차 할 수 없는 '느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가?

'지방소멸'의 통치: 청년 × 지역

한국 사회에서 지방소멸이란 화두는 다양한 시간을 품고 있으나, 정부 주도 아래 통치 레짐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을 특정 방식으로 마름질하고 있다.

특히 도시 청년의 농산어촌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다양한 파트너십 하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정착, 취업, 창업, 활동, 실험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핵심 역량으로 호명된다. 수도권에서 고용·주거 불안을 감내하던 청년과 초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잃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복안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재 내가 인류학 현장연구를 수행 중인 경상도 소래군(가칭)의 경우도 다양한 이주 청년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 청년 살아보기, 예술가 레지던시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도시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각종 프로젝트 기획자, 실무자, 참여자,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영업자와 농부 등 이주 청년들의 구성은 실로 다양하다.

이주 청년 지원사업의 시간성

다양한 배경의 이주 청년들은 기한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도시에서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 프로젝트가 특정 시기에 특정 시간 범위를 두고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들의 관심은 주어진 시간 안에 지표화된 성과를 구현해내는 데 집중된다.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 그 성과가 주어진 시간 안에 실현 가능한가를 두고 정부와 사업 위탁 기관, 공무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청년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정부의 행정 사이클에 맞춰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와 겹친다. 시간을 조율해 행사를 마련해도 정치의 시간과 충돌하기 일쑤다.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한 청년들이 “군수님이 참석하지 못하니” 일정을 바꾸라는 공무원의 요청에 당황해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선출직 관료나 정치인의 임기 안에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은 내가 만난 이주 청년들이 비슷한 내용과 문법으로 반복되는 프로젝트를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사업에 몰입한 채 ‘지방소멸’을 무미건조한 정책 언어로 반복하던 청년들이 “진짜 소멸”의 순간을 실감했다. 어떤 청년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집이 전소된 피해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재난 복구 때문에 지원사업 예산이 끊길 상황을 우려하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 ‘청년’과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지방에서 로컬로?

앞서 언급했듯, ‘지방소멸’이라는 의제는 지구적 위기를 국민국가 테두리로 영역화하고,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댄 채 그 사라짐을 애도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 단어가 정책 공론장 너머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 지방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일 테다. 인프라 부족과 마모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탈성장'을 강요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되묻고 있다.

그러나 이주 청년 지원사업에서 보듯, '지방소멸' 통치 레짐은 파국의 시간을 행정과 정치, 프로젝트 수행과 감사의 시간으로 잘게 분절함으로써, 이 과정에 연루된 행위자들이 '소멸'을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쟁점으로 만들 가능성을 훼손한다. 이 통치 레짐은 지방을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온 구조적 위계와 폭력을 공론장 바깥으로 밀어낸 채, '무거운' 지방을 '가벼운' 로컬로 번역해낸다. 로컬 비즈니스,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프리너 등, '로컬'은 살아보기, 창업지원, 문화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수행자를 모두 포괄하는 지시어로 작동한다. 연로한 주민이 대대로 살아온 집터와 평생 일군 밭은 산불로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로컬' 명명이 붙은 온갖 사진과 콘텐츠는—그 대상이 이미 망하거나 사라졌음에도—좀비처럼 온라인 공간을 떠돈다.

수도권 시민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방'과 '로컬'이 특정한 방식으로 상상되고 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을까? 수도 서울의 공연 무대에서 펼쳐진 로컬의 향연 이후, 우리는 이 과정에 어떻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사, 인류학과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대 중국학센터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빈곤, 청년, 통치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현장연구를 수행 중이다. 『빈곤 과정』, 『연루됨』, *The Specter of "The People"* 등을 썼다.